

# 지역신문에 나타난 18대 총선보도의 문제점과 논의

- 폭로, 여론조사, 연고주의 보도를  
중심으로 -

이 효 성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졸
- MI University of Wisconsin - Whitewater 언론학 석사 및  
MI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Carbondale 언론학 박사
- 부산일보 기자, 청주총독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 위원
- 현(現) 언론중재위원회 총복중재위원
- 논문 및 저서 : "미디어 이용이 정치지도자  
평가와 정당 지지에 미치는 효과",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이용이 유권자의 정치의식, 16대  
대선관심, 정치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1. 문제제기

유권자들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직접 접촉보다는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곤 한다. 특히 투표와 같은 정치적 행위는 이제 언론을 통해 그려지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대중적 이미지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투명하고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정치적 행위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언론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 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벌써 다섯 번이나 치렀다. 그 외 국회의원 총선거 및 다양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또한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미디어 선거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와 발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각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거 캠페인 보도에 있어 언론은 유권자의 정보욕구 충족이라는 본연의 공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언론의 불공정 선거보도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08 총선 미디어연대'는 지역별 총선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지역신문이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www.vote2008.or.kr). 신문사의 전직 임원들을 집중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에 호의적인 기사가 다른 신문보다 몇 배 가량 많았던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신문들은 편파성 폭로 기사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지면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www.hani.co.kr, 2008년 4월 3일자). 이러한 불공정 선거보도 행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할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임은 물론, 지역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불공정 보도로 인해 그동안 어렵게 이룩해온 언론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는 언론으로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그동안 지적돼온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가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캠페인 보도에서도 나타났는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지역언론의 보도 행태를 폭로 저널리즘, 여론조사, 연고주의 저널리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들 문제와 연관 지어 지역언론 선거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 2. 흥미보도와 공정성, 객관성 문제

현대 정치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보도 행태는 여전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이 많다. 언론은 선거 캠페인 보도에서 정책이슈와 같은 공익적 보도보다는 경마 저널리즘이나 폭로 저널리즘과 같은 흥미위주 보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언론의 행태가 유권자들의 유익보다는 흥미에 영합하는 등 선정성에 치우침으로써 선거를 단순히 흥밋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디어의 정책이슈 보도의 양은 정치집단에서 발표하는 정책이슈의 양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기간 동안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도하는 이슈의 양은 정당 등 정치권에서 내놓는 이슈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raber, 1997).

우리나라 언론 역시 선거의 이슈보도에 미진한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원우현, 1988) 국회의원 선거(이관열, 1992)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이렇다 할 선거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또한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서도 그 이슈의 중요성 보다는 흥미성 등에 뉴스가치의 주안점을 두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은 아

무리 하찮은 것이어도 미디어의 관심을 끌게 된다. 예를 들어 1992년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네트워크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기사 여섯 건 중 한 건은 빌 클린턴(Bill Clinton) 예비후보의 섹스 스캔들, 대학생 시절 마약복용 문제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기사들이었다(Graber, 1997). 반면 언론은 빈곤, 환경, 노인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폭력이나 액션, 갈등과 같은 극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한 선거보도에서 외면하고 있다. 실업, 인플레이션, 세금 등 경제적 이슈 역시 보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 저널리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평형을 잃지 않고 언론으로서의 초연함을 지키며 보도함을 의미한다(이배영 외, 2006). 특정 입장이나 사실을 다른 입장이나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양적·질적 차원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 배열, 보도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정하지 않으면 사실이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윤리강령은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윤리강령을 보면 공정성은 포괄성, 형평성, 정직성, 솔직성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의 실천을 통해 도달되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주 중요하거나 특별한 요소를 제외시킨다면 어떤 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성은 포괄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특별한 사실을 희생시키면서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정보를 포함한다면 어떤 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성은 형평성을 의미한다. 셋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독자를 오도하거나 심지어 기만한다면 어떤 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성은 독자에 대한 정직성을 포함한다. 넷째, 교묘하게 멸시적인 단어들 뒤에 편견이나 감정을 숨긴다면, 어떤 기사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성은 교활성이 아닌 솔직

특히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

성을 요구한다.

또한 객관성 혹은 객관 보도란 한마디로 사건을 취재·보도하는데 있어 언론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배제하고 일어난 현상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배영 외, 2006). 즉 객관보도란 기자가 관찰한바 그대로를 개인적 의견이나 편견 없이 사실적으로 보도함을 의미한다. 기자 개인적 선호에 근거한 가치 지향적 용어나 관점의 사용에 신중하며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논평이나 칼럼 등과 같은 의견기사가 아닌 보도기사(straight news)에서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본고는 이 같은 맥락에서 18대 총선 캠페인을 보도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우선 폭로 저널리즘 행태를 살펴보았다. 이어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표본오차 범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고주의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3. 방법론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인 2008년 3월 27일(목)~4월 8일(화) 13일 간의 기사를 분석했다.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 중에서 3개 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대전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3개 지역일간지는 한국언론재단의 DB(www.mediagaon.or.kr)에 등재된 2개 지역 일간지 중에서 채택됐다. 이들 매체를 대상으로 '선거'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제

18대 총선과 관련된 기사를 추출했다. 이들 기사 중에서 '폭로성'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또한 '여론조사' 키워드 검색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추출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고주의 보도행태 분석을 위해 '지역주의', '지역감정', '연고주의'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연고주의 관련 기사를 추출해 분석했다.

### 4. 지역일간지의 보도 분석

#### 1) 폭로 저널리즘 분석

선거 관련 기사 중에서 폭로 저널리즘으로 분류할 만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전일보의 선거 관련 기사가 204건이었는데 이중 '폭로성' 기사는 25건에 달했다. 매일신문은 선거기사 219건 중 29건, 광주일보는 152건 중 20건이 폭로성 기사로 분류되었다. 폭로 저널리즘 기사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지역일간지의 선거 및 폭로성 기사 건수

	선거기사	폭로성 기사
대전일보	204건	25건
매일신문	219건	29건
광주일보	152건	20건

#### (1) 대전일보

폭로 저널리즘에 해당되는 25건의 기사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등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선거 운동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었다. 예를 들어

‘대전지검이 충남 연기군 재선거 관련,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이라거나,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한 김택기 전 후보가 측근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는 기사 등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후보들 간 부정·비리 폭로나 고소·고발 내용 자체를 보도한 기사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예를 들어 친박연대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등장시켜 ‘저도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은 박근혜 죽이거다’라는 내용의 총선 홍보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를 다룬 기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폭로성 기사로 분류될 만했다. 4월 4일자 신문에서는 충남 부여·청양의 자유선진당 이진삼 후보가 한나라당 김학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김 후보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두 아들이 군에 안 갔다’는 의미로 발언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및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후보가 고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상민 후보가 유성구 무소속 이병령 후보에 대해 ‘자기부상열차 인천에 빼앗긴 결정 지지발언’이란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해 고발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의 대전일보가 4월 3일자에서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항응제공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 검찰에 고발됐다’ 등의 기사들도 폭로 저널리즘으로 간주할만한 내용들이었다.

## (2) 매일신문

앞서 밝힌 대로 매일신문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

219건 중 폭로 저널리즘에 해당되는 기사는 모두 29건이었다. 이들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경찰 등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영장 신청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다. 예를 들어 경북경찰청은 경주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주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거나 거액의 금품이 뿌려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 후보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식의 전형적인 네거티브 폭로성 주장들을 보도하는 기사도 많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묻지마 출마자’, ‘급조된 친박연대는 철새정당’ 등과 같은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홍지만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학위 증명서와 홈페이지 및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학위 명칭이 달라 친박연대 박종근 후보 측이 선관위에 허위학력 기재가 아니냐며 사실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박팔용 후보 측이 금품을 돌렸다는 시민 신고가 있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도 게재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박 후보 진영은 이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상호 간에 공방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구 달서을의 한나라당 권용범 후보 측은 ‘무소속 이해봉 후보가 권 후보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전형적인 폭로 저널리즘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흑색선전이나 폭로전에 대해 매일신문은 4월 4일자 기사에서 “접전을 벌이는 선거구일수록 수위가 높으며 흑색선전은 고발해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경고’ 등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데다 대응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언론은 신중히 생각하고 보도해야**

방법도 마땅치 않아 후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처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언론도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겠다.

(3) 광주일보

선거 관련 기사 152건 중 폭로 저널리즘으로 분류된 기사는 모두 20건이었다. 광주일보에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경찰 등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수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광주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총선 입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경선 상대후보를 비방한 광주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나타났다. 선관위가 해남의 모씨가 특정 후보 진영에서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또한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전개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향응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음을 우려하는 기사도 게재됐다. 이는 물론 언론으로서의 환경감시 차원에서 필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치나 유권자 의식 수준의 단면을 보여주는 폭로성 기사라고 할 수 있겠다.

후보들 간 비방과 흑색선전 등을 기사화한 전형적인 폭로 저널리즘 행태도 많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4월 7일자에서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송병태 후보 자원봉사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 감시활동 중인 자원봉사자가 민주당 김동철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동철 후보 측의 해명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게재한 것은 명백한 폭로 저널리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신문은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은평 뉴타운 현장을 방문해 최측근인 이재오 후보를 간접 지원하고 수도권 선거의 핵심인 통합민주당 김진표, 한명숙 후보에 대해 음해공작을 획책하며 관련선거를 통한 야당죽이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광주일보는 이러한 통합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오히려 금권선거를 자행하고 구태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불어 게재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다루고 있지만 명백한 근거 없이 후보나 정당 간 주고받는 폭로성 주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도 행태가 아니었다.

2) 여론조사 기사 분석

여론조사 기사 건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전일보의 선거 관련 기사는 204건이었는데 그중 여론조사 관련 기사는 32건이었다. 매일신문은 선거 기사 219건 중 여론조사 기사가 47건으로 수적으로는 가장 많았다. 광주일보는 선거기사 152건 중 여론조사 기사가 40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2> 지역일간지의 선거기사 및 여론조사 기사 건수

	선거기사	여론조사 기사
대전일보	204건	32건
매일신문	219건	47건
광주일보	152건	40건

(1) 대전일보

공식 선거캠페인 기간 중 대전일보는 조선일보, SBS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총선 관련 2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 모두 32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중 여론조사를 주로 이용한 판세 분석 기사는 17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여론조사에 의하면' 식으로 출처미상의 여론조사를 기사에 인용하는 정도였다.

우선 3월 2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3월 27일자 1면과 5면에 걸쳐 2건의 기사로 게재됐다. 충청권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의 격전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처럼 '격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와 오차범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여론조사가 충청권 5개 선거구 별로 509명 ~ 51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샘플링 절차,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어 4월 2일자에서도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27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선거구에서 1, 2위 간 격차가 크지 않아 혼전양상임을 보도했다. 특히 부동층이 두터워 선거막판까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는 27일자 보도와 달리 신뢰수준과 표본오차 범위를 기사의 마지막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 보도 역시 1면 기사에서만 제시됐을 뿐 3, 4, 5면 기사에서는 신뢰수준과 오차범위 등 자세한 사항이 제시되지 못했다. 물론 샘플링 등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합법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4월 3일자에 그동안의 자체 조사결과와 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sup>1)</sup> 이들 기사 역시 신뢰수준과 표본오차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4일자에서 '무소속 이인제 후보(19.8%)와 통합민주당 양승숙 후보(17.2%)는 오차범위 내 초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오차범위나 샘플링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여론조사를 간단히 인용하는 정도의 기사에서는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전일보는 '조선일보, SBS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가 한국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했음을 내세워 충청권 표심의 향배를 제대로 파악하는 등 각 후보별 전략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었다.

(2) 매일신문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매일신문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모두 47건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포함해 여론조사 내용을 주로 다룬 기사는 모두 21건이었다. 나머지는 막연히 '여론조사에 의하면' 식으로 출처미상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정도의 기사였다. 이들 여론조사 인용 기사는 모두 오차범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주로 여론조사를 다룬 21건의 기사에서 간략하게나마 오차범위를 언급한 기사는 3건이었다. 다시 말해 전체 여론조사 관련 기사 47건 중에서 신뢰수준과 오차범위를 언급한 기사는 단 3건이었다.

3월 31일자 기사에서 매일신문은 대구·안동MBC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회사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

1) 선거법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 6일 전인 3월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론조사 관련 보도 시 과학적인  
무작위 표집절차와 신뢰수준, 응답률 등의  
정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해줘야*

해 3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매일신문은 한나라당 후보와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 후보들이 초반에 이어 중반에도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4개 선거구별로 각각 500명 ~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사실과 선거구별 표본 오차 범위를 표기했다. 하지만 표집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한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많은 기사에서 신뢰수준이나 오차범위, 샘플 크기, 표집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대전일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보 간 지지율이 '표본오차 범위 내'라고 하면서도 그 표본 오차 범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대구, 경북의 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분석기사에도 유사한 보도 행태가 나타났다. 즉 첫 여론조사 분석기사의 경우는 표본오차 범위 등이 언급됐지만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다른 면이나 다른 날짜의 기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총선 투표일 하루 전이자 공식선거 캠페인 마지막 날인 4월 8일 '들쭉날쭉 여론조사... 신뢰성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여론조사가 조사 주체마다 큰 차이를 보여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조사를 하지 못해 조사결과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저조한 응답률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자체나 이를 보도하는 기사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본과 신뢰수준, 표본오차 범위 등과 같은 과학적 절차는 물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보도 태도가 중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3) 광주일보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여론조사 기사를 40건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론조사를 주로 이용한 판세 분석 기사는 9건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기사 작성에 출처미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정도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여론조사를 주로 이용한 이들 기사 9건 중에서 신뢰도와 표본오차 범위 등을 언급한 기사는 5건이었다. 특히 '오차범위 내 접전지역은 몇 곳' 등의 기사가 자주 등장했지만 그런 접전지역에 대한 설명에서조차 오차범위는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월 30일자 기사에서 3월 26일 광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었다. 하지만 표본오차 범위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전남 목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후보가 27.5%의 지지율을 기록, 민주당 공천을 확보한 정영식 전 행자부 차관을 불과 0.6%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 표본오차 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앞선다거나 뒤진다는 식으로 분석·보도하는 것은 판세를 호도하는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선두마차(Band wagon effect) 이론에 따르면 특정 후보가 선행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도되면 그 후보는 다음 조사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유권자들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꺼려 우세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박지원 후보는 상당히 유리하게, 반대로 정영식 후보는 불리하게 보도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의 부정확성과 관련, 광주일보는 '숨은 표

심 5%'를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즉 '숨어있는 5%'는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때 표심을 일부러 숨긴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인용하며 '3 ~ 5%' 정도의 유권자들은 조사 때 나타나지 않다가 실제 개표 때 공개되면서 승패 예측을 뒤집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합리화 할 수 없다. 이런 변명 이전에 과학적인 무작위 표집절차와 신뢰수준, 표본 오차, 응답률 등을 제시하며 신중하게 보도하는 자세가 우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고주의 기사 분석

전체 선거 관련 기사와 연고주의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전일보의 연고주의 관련 기사는 15건이었다. 매일신문과 광주일보의 연고주의 기사는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과 광주일보에 비해 대전일보에서 연고주의 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의 등장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지역일간지의 선거기사 및 연고주의 기사 건수

	선거기사	연고주의 기사
대전일보	204건	15건
매일신문	219건	5건
광주일보	152건	5건

#### (1) 대전일보

우선 제목에서조차 지역주의 차원의 연고주의를 확연히 드러내는 기사가 5건이나 게재됐다. 예를 들어, '선진당, 충청인 자존심·명예 회복할 때', '관록 류

근찬 - 충청 자존심 되찾아야', '충청은 우리 땅', '충청 공정', '이회창 텃밭 민심잡기' 등이 등장하는 기사가 특히 눈에 띄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온 국민에게 보여줄 때가 온 만큼 이번 총선에서 진정한 충청인의 일꾼으로 선진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는 이 총재의 연설을 인용했다. 보령·서천 류근찬 후보의 '그동안 영남·호남 정권에 속고 또 속아왔다. 이번이야 말로 잃어버린 충청의 자존심을 찾고 보령·서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지지 연설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정권창출 이후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충남 출신 기업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내세워 경제활성화를 강조' 하고 있음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충청도를 대변하는 자유선진당', '지역주의에 기대는 선진당', '자유선진당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만 일삼고 있다.', '지역감정으로 뽑힌 국회의원', '자유선진당은 지역주의에 기대는 세력', '충청홀대' 등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 (2) 매일신문

연고주의를 드러내는 기사가 5건 게재됐다. 우선 제목을 살펴보면 '안동 총선은 문중의 힘?', '고향사람 뽑자 - 소지역 대결', '안동금배지 다산될까', '안동 출신 국회의원 4명 탄생하나' 등이 게재됐다. 이처럼 매일신문은 혈연 및 지연 차원의 연고주의 기사를 주로 다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동 지역 만큼 대문중의 입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곳도 드물다', '정당공천도 중요하지만 문중공천을 받기 위해' 등의 내용이 기사에 포함됐다. 또한 2 ~ 4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복합선거구에서는 소지역 대결구도가 드러난다는 점

###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드러내는 기사가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히 나타나

을 다루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이 인구수가 적은 시·군 지역 출신일 경우, 인구가 많은 시·군 지역 출신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역정서를 파고 들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특히 안동 지역구를 포함하면 안동 지역 출신이 한꺼번에 4명의 의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동 지역 주민들의 지연 차원의 연고주의를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김정현 안동시 의원이 '4명의 안동 출신 국회의원을 얻는다면 안동 발전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4배로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유권자들 사이에 안동 사람이 더 당선될 수 있도록 정당표도 한 곳으로 몰아주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 바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 (3) 광주일보

광주일보에서도 매일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고주의를 드러내는 기사가 5건 게재됐다. 우선 제목을 살펴보면, '지역출신 뽑아야죠', '소지역주의 되살아나나' 등의 내용이 나타났다. 해남·진도·완도 선거구는 대부분 섬지역인 탓에 타 지역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배타적인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소지역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기사에서도 도심 생활권인 광주보다는 2~3개 군이 1개의 지역구로 묶여있는 전남에서 소지역주의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각 정당의 공천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졌고 쟁점이 분명치 않아 소지역주의가 되살아날 것 인지가 관심거리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일보의 한 기사에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소지역주의에 대해 영·호남 갈등처럼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며 소지역주의 편승보다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지역주의 혹은 연고주의를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는 전반적으로 광주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등 모두에서 극히 드물었다.

## 5. 결 론

### 1) 요약

지역신문들은 우선 폭로성 기사를 상당수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문제 그리고 후보 간 고소, 고발과 관련된 단순 폭로성 내용을 다룬 기사가 많았다. 하지만 금품, 군복무, 학력, 폭행 등과 관련된 후보들 간 비방과 폭로성 주장을 명확한 증거 없이 보도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가 분석 대상 지역신문들에 매우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 샘플링 과정이나 표본오차 범위 등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접전인 경우 오차범위를 제시하지 않거나 혹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리한 후보를 더욱 유리하게 하고 불리한 후보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식으로 조사방법은

물론 조사기관이나 출처조차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채 보도하는 행태도 문제였다. 이는 여론조사를 남용 내지 악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연고주의 문제와 관련, 대전일보의 경우 지역주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됐다. 이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의 등장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권과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일신문의 경우는 혈연·지연 차원의 연고주의 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였다. 안동이라는 '특수' 지역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보도 태도 역시 문제다. 광주일보는 여러 소단위 지역이 묶여 이루어진 선거구에서 나타난 '소지역주의'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2) 논의

폭로 저널리즘은 선거 분위기를 타락한 모습으로 보이게 함은 물론 선거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치게 해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감이나 냉소주의를 더욱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폭로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지킴이로서 언론 자신의 막중한 공익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폭로 저널리즘에 의존할 경우 언론은 수용자로부터의 신뢰성 상실은 물론 법적 다툼에 휘말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 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 우열가리거나 선두다툼을

주로 다루는 경마 저널리즘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부상하면 이후부터 그 후보는 더욱 언론의 각광을 받게 되고 여론조사의 인지도는 더욱 상승세를 타게 된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드러난 후보는 정반대의 불리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론조사 보도는 조사절차와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은 물론 표본오차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언론, 특히 지역언론은 표본오차를 포함해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보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이는 정확성을 핵심으로 하는 객관성은 물론 공정성 문제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마 저널리즘에 동원되는 여론조사는 종종 부정확하거나 과장돼 보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이래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선거 여론조사와 보도는 이제 국민과 유권자의 생활과 정치적 판단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조사가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 되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보도되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문제성 있는 여론조사와 보도는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됨은 물론 여론조작의 한 방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보도하는 언론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언론, 특히 지역언론의 선거 보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고주의 저널리즘이다. 선거 캠페인이 과열돼 지역감정 혹은 연고주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의 해

폭로 저널리즘, 부실한 여론조사 보도,  
지역주의에 편승한 보도 등의 행태는  
우리 지역언론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

결에 대한 인식과 노력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언론 보도 행태 역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역신문들은 선거 캠페인 과정을 지역 기반의 정당 간 대결 국면으로 보도함은 물론 이를 특히 소지역주의, 혈연 등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정치사회적인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연고주의 문제를 악용하는 정치권도 문제이지만 선정적으로 확대보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언론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남시욱(2001). 「인터넷 시대의 취재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원우현(1988, 1월). 13대 대통령 선거보도 검증: 언론보도 총평. 『신문과 방송』. pp. 19 ~ 23.  
이관열(1992, 4월). 14대 총선보도 검증: 방송. 『신문과 방송』. p. 96.  
이배영 외(2006). 「멋진 편집 좋은 신문」. 서울: 한울아카데미.  
Graber, D. A. (1997). *Chapter one: Media power and government control.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p. 6). Washington, DC: CQ Press.